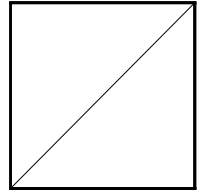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187호
의 결 연 월 일	2022. 6. 22. (제12차)

의
결
사
항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승범
제출 연월일	2022. 6. 22.

1. 의결주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10.6.~2021.10.13. 기간 중 실시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 요구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1>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2항,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금융업종별·위반 유형별 제재 양정기준)

다. 관계부서 협의

-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2022.3.10.) 심의필
- 제10차, 제12차 금융위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5.19., 6.16.) 심의필

<별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지점 팀장 ●●●, ◇◇◇◇◇부 팀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2명)
 - 조치사유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2항,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 양정기준)
- ○○지점 차장 ◎◎◎, ◇◇◇◇◇부 팀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차장 ▼▼▼, ♠♠지점 과장 ♠♠♠, ◇◇◇◇◇ 팀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차장 ◁◁◁, ○○지점 팀장 ▣▣▣, ●●지점 파트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10명)

- 조치사유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1항, 제2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 양정기준)

- ○○지점 과장 ■■■, ■■■지점 팀장 ■■■, ■■■지점 팀장 ♥♥♥, ■■■지점 팀장 ■■■, ■■■실 차장 ■■■, ■■■지점 팀장 ■■■, ■■■지점 팀장 ○○○, ■■■지점 팀장 ▷▷▷, ■■■지점 과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팀장 ▲▲▲, ■■■지점 차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팀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과장 ▽▽▽, ▽▽지점 팀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팀장 ○○○, ○○지점 팀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과장 ■■■, ▲▲지점 파트장 ▶▶▶, ▽▽지점 팀장 ◀◀◀에 대하여 각각 “주의”로 조치(24명)

- 조치사유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 양정기준)

○ 前 XX지점 팀장 ◁◁◁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 주의 수준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제4호, 제64조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조치사유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실명법」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제1항, 제5조의2(행정처분) 제3항 제2호, 제7조(과태료) 제1항,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 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별지 제4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제1항,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2항, [별표3](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 양정기준)

◆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신분 제재안을 수정 심의

-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자 25명 중 20명*에 대해 신분 제재 면제**

* , , , , , , , , , , , , , , , ,

순번	요구기관	제공일자	통보기한 (유예기한)	통보일	위반유형	위반 일수	평의원 수	위반일	행위자
1	☒☒세무서	2015.2.12	2015.8.27	2015.11.3	지연통보	45	4	2015.8.28	♣♣♣
⋮	⋮	⋮	⋮	⋮	⋮	⋮	⋮	⋮	⋮
11	★ ★ 세무서	2016.2.11	2016.8.26. (2016.8.11.)	2016.8.4	유예기간 중 통보	5	1	2016.8.4	●●●
⋮	⋮	⋮	⋮	⋮	⋮	⋮	⋮	⋮	⋮
89	※※※도 ※※시	2016.10.7	2016.10.21	-	미통보	-	1	2016.10.24	□□□
합 계							000건		

(2)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4조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 목적, 제공자 및 제공일,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등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한국산업은행 ◇◇◇◇◇부 등*은 2015.5.26. ~ 2021.6.28. 기간 중 사용 목적,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사유 등을 누락(XX건)하거나 요구자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일을 실제 제공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입(※건)하여 기록·관리한 사실이 있음

[총 27명(통보 의무 위반 중복 2명), 총 11건 위반]

* 2개 본점 부서(◇◇◇◇◇부, ■■■■실) 및 22개 영업점(●●, ●●, ●●, □□, XX, ▨▨, ■■, ◆◆, △△, ●●, ▲▲, ▷▷, ⊕⊕, ▽▽, 目目目, △△, ▨▨▨, ○○, ■■, □□, ●●, □□)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주요 명세

순번	요구기관	제공일자	통보일	명의인 수	위반일	위반유형	행위자 성명
1	□□지방국세청	2015.5.26	2015.11.27	1	2015.5.26	법적 근거 누락	△△△
⋮	⋮	⋮	⋮	⋮	⋮	⋮	⋮
14	■▨지방경찰청	2016.10.25	2017.4.25	1	2016.10.25	유예 사유 누락	▨▨▨
⋮	⋮	⋮	⋮	⋮	⋮	⋮	⋮
35	▨▨지방법원 ▨▨지원	2021.6.28	2021.6.28	1	2021.6.28	제공 목적 누락	▶▶▶
36	○○○○지방법원 ○○○○지원	2019.10.22	2019.10.22	1	2019.10.22	통보일 누락	▨▨▨
37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2019.6.20	2019.6.26	1	2019.6.27	실제 제공일(19.6.20)이 아닌 다른 날(19.6.27)로 기록·관리	▨▨▨
합 계					11건		

< 붙임 >

관 계 법 규

1.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④ (생략)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300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7조제1항	500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법 제8조	1,00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4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보관기간 : 5년)																	
관리 번호	요구 일자	요구 기관	요 구 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법적 근거	요구받은 인적사항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 일자	제 공 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명익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제 공 된 인적사항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담당자	책임자		통보 유예를 한날	사유			기간	횟수		
			담당자	책임자													

1. 사용목적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요구받은 인적사항 및 제공한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3. 통보를 유예한 경우 사유 : 법 제4조의2 제2항 각호중 해당번호를 기재

2. 검사 및 제재 관련 법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면직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 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다. 변칙적·비정상적인 업무처리로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하여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문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② (생략)

-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견책~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3. 감사통할책임자 등 기타 감독자에 대한 조치

- 가. 영업점 감사통할책임자에 대하여는 금융질서문란, 사회적물의를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나. 부·점장에 대하여는 감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사회적 물의의 정도에 따라 견책 이상으로 제재할 수 있다.
- 다. 임원과 감사에 대하여는 재임기간중 관할 부·점장이 행위자로서 위반한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독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4. 기관에 대한 조치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당해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히 문란시킨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가중 및 감경

-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 다. <삭 제, 2016.2.29.>
-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특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2	02-3145-7196